

07 세미나

1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공동 주최

국가회계 분야 연구성과물 확산 및 전문가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는 '2018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를 '한국정부회계학회'와 공동 주최함

가. 개요

- 1) 일시: '18.12.7(수) 13:00~18:30
- 2)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기록관 2층 강당
- 3) 주최: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4) 후원: 한국경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 이상열 교수(한양대학교)

[세션 1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발표1] '18년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소개
(한소영 회계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표2] IPSASB 최근 경향 및 주요 이슈
(이남주 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표3] 2017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
(현지용 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표4] 공익법인회계/유치원 회계기준 이슈
(박윤진 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2부] 한국정부회계학회 세션

[발표1]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제도의 효과성 검증
(엄기중 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토론1]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광화 교수(강원대학교)

[발표2]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
(김봉환 교수, 서울대학교)

[토론2] 박성환 교수(한밭대학교), 임동완 교수(단국대학교)

[발표3] 벤포드법칙을 이용한 지방 공기업의 부채 비율 조정행태의 연구
(김동욱 교수, 제주대학교)

[토론3] 안성윤 교수(가톨릭대학교), 강성조 연구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발표4] 지방채 활성화를 위한 재무보고 개선방안: 신용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이계형 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토론4] 정일환 교수(송실대학교), 김응길 교수(송실대학교)

[세션 3부] 라운드테이블

[좌장] 강인재 박사(재정성과연구원)

[발표] 슈퍼예산시대의 국가회계(김이매 교수,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토론] 강태혁 교수(한경대학교), 김경호 교수(홍익대학교), 배득중 교수(연세대학교),
양영철 부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남주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유병연 부장(한국경제신문)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세션 1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 (발표 1) '18년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소개(한소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1부 첫 번째 주제인 「'18년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소개」는 한소영 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발표하였다. '18년 국가회계기준은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분석 시 활용하기 위하여 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 용어의 정의 및 원가 구분을 명확하게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금융상품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종자본증권, 투자일임계약, 내재파생상품의 계정 분류 예시를 신설하였다. 또한, 연금충당부채의 국가 간 비교 가능성 및 국가재무제표 자산·부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연금충당부채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세분화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 (발표 2) IPSASB 최근 경향 및 주요 이슈(이남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1부 두 번째 주제인 「IPSASB 최근 경향 및 주요 이슈」는 이남주 국가회계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은 최근 수행의무접근법(PSPOA)으로 수익 인식 체계가 변화되면서 수익정보가 수행의무의 이행 정도(성과)와 연계되어 보다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회계원칙(IPSAS 42, Social Benefits)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회계처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발표 3) 2017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현지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1부 세 번째 주제인 「2017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는 현지용 결산교육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 자산은 2,062.5조원, 부채는 1,555.8조원, 재정운영결과는 21.1조원이며, 재무제표상 자산(부채)과 개별법상 재산(채무) 차이는 포괄 범위, 대상 차이, 측정 기준의 차이에 기인한다.

□ (발표 4) 공익법인회계/유치원 회계기준 이슈(박윤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1부 네 번째 주제인 「공익법인회계/유치원 회계기준 이슈」는 박윤진 재정통계팀장(한국조세

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으나 외부감사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이 많아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국제청의 인력 부족으로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무공시 제외 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확대를 통한 회계정보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회계규정에 대한 법 규정 미비로 부정 사건이 발생한 것일 수 있으므로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부의 검토 또는 인증을 받아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션 2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 (발표 1)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제도의 효과성 검증(엄기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2부 첫 번째 주제인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제도의 효과성 검증」은 엄기중 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광화 교수(강원대학교)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중열) 연구에 포함된 모형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량평가상 가중치는 자의적인 가중치일 수 있기에 가중치에 대한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

(정광화) 제목의 ‘경영 실적 평가제도의 효과성 검증’은 경영 실적 평가제도 전체의 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제를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계량지표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목표 부여(편자) 방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6가지 방법도 동시에 검증하여 우월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발표 2)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김봉환, 서울대학교)

세션 2부 두 번째 주제인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은 김봉환 교수(서울대학교)가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박성환 교수(한밭대학교), 임동완 교수(단국대학교)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성환) 모형1과 모형2를 하나의 모형으로 변경하고, 세부사업 단위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불용액과 성과 간 관계 확인이 쉽지 않으나, 단위사업 성과 보고서와 연계하여 불용액이 증가하면 성과가 낮아진다는 것을 밝혀보는 연구를 진행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동완) 추가경정예산 승인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 (발표 3) 벤포드법칙을 이용한 지방 공기업의 부채 비율 조정행태의 연구(김동욱, 제주대학교)

세션 2부 세 번째 주제인 「벤포드법칙을 이용한 지방 공기업의 부채 비율 조정행태의 연구」는 김동욱 교수(제주대학교)가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안성운 교수(가톨릭대학교), 강성조 연구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성운) 부채를 감소시키면 자산 또는 자본이 변동되므로, 부채 규제 시 규제 대상자들에게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궁금하였고, 자산 재평가 등 실물이익 조정이 괜찮은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첫 번째 자리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리까지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며, 단계적으로 규제가 변동할 때 벤포드법칙을 따르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강성조) 유형별, 규모별(직영기업, 공사·공단)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은 지방의회의 통제가 가능하므로 부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낮으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경기도시공사 등과 같은 공사·공단은 벤포드법칙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발표 4) 지방채 활성화를 위한 재무보고 개선방안: 신용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이계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세션 2부 네 번째 주제인 「지방채 활성화를 위한 재무보고 개선방안: 신용평가 모델을 기반으로」는 이계형 연구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정일환 교수(송실대학교), 김응길 교수(송실대학교)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일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이미 많은 재무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재무의존성 재무지표를 추가하는 등의 보고 개선만으로 지방채가 활성화될지 깊은 고민이 이루어

저야 한다. 또한 현재 지방채 관리자(행정안전부)와 금융시장(한국거래소) 간 지방채의 정의가 불일치하므로 지방채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김응길)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다면 자원조달비용이 낮아지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채권자(수요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해외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1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기록관 2층 강당〉

[세션 3부] 라운드테이블

세션 3부에서는 「슈퍼예산시대의 국가회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좌장 강인재 박사(재정성과연구원)를 중심으로 강태혁 교수(한경대학교), 김경호 교수(홍익대학교), 배득중 교수(연세대학교), 양영철 부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남주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유병연 부장(한국경제신문)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태혁) 예산은 규모 또는 증가 속도가 아닌 예산 사용 분야에 초점을 맞춰 생각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의 GDP 대비 예산 규모가 40~50%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예산 규모 470조원은 내년 GDP 1,800조원 대비 30%도 안 되는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뒤에서 4번째

순위에 불과하다. 또한, 재정은 항상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우리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예산 증가 속도는 빠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산 사용 분야를 살펴보면 현재 전체 예산 중 약 40%는 사회복지 예산에 사용되고, SOC 및 R&D의 예산 증가율을 상당히 낮아 경제성장보다는 분배·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일자리 창출 역시 사회복지적 일자리(장애인, 노인, 세터민, 다문화가정)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경호) 첫째, 초슈퍼예산이라고 할 정도로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14개 분야 중 유일하게 SOC 예산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충당부채 인식과 관련하여 정책적 고려가 배제될 수는 없는 상황이나, 연금에 대하여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은 후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앞으로 연금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주식, 필수 보충정보 등에 설명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기오류는 대부분의 의도성이 없는 오류로 국민을 속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결산 담당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이니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비연속성 문제와 정부의 국가회계에 대한 관심이 없는 현재 상황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넷째, 중소기업 및 해외 원조 관련 기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면 기금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 남북협력기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예외를 둔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실질이 무상원조 성격이므로 설명자료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올해부터 지방회계 대상을 심사하여 시상하게 되었으며, 국가도 서로 경쟁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참고하는 것을 제안한다.

(배득중) 예산과 회계를 연계하는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결산서의 정보 활용이 필요하다. 예산의 경우 예산 규모는 GDP와 연관이 있어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상징이며,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결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출 규모에만 관심 있고, 성과와의 연결을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며, 향후 결산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양영철) 지방자치단체 회계도 국가회계와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에 대한 민간의 불신과 공격을 없애기 위해 원가절감 효율성, 원가의 정확한 산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도입하였다. 세션 1의 발표 1을 통해 국가회계기준의 비배분비용·비배분수의 관련 개정은 정확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시 재무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국가회계의 노력을 알 수 있었으며, 정부회계는 이처럼 정확한 정보를 발생주의 시점으로 보여주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남주) 국민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정책 당국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미확정성, 변동성이 존재하므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를 재정건전성 악화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연금충당부채의 변동성 및 국가직·지방직의 구분정보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전기오류의 경우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하위 조직이 많은 부처에서 말소 재산이 정리되지 못해 발생한 건이 많으므로 오류 감소를 위해 국유재산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오류 중 자산 누락으로 인한 부분을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 평가 환류, 공공재정의 알기 쉬운 설명 제공, 재정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으로 재정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병연) 국민·주민은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눈을 떠야 하고, 중앙·지방정부는 국민들이 나라 살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처럼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정부회계의 주요 의무인데, 국민·주민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한결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100~200페이지에 걸쳐 대국민 메시지, 경영진 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먹구구식의 회계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회계의 소통과 투명한 회계를 위해 많은 연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1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기록관 2층 강당〉